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도청 보존을 위한 공대위'가 철거와 보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옛 도청 별관(사진 내 점선) 전경. /최현희기자 choi@kwangju.co.kr

'옛 도청 별관 철거' 상생 방안 찾아야

5월단체 농성... 문화전당 건립 차질
'광주시 미래 좌우' 市 적극 중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에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의 철거를 반대하는 5월 단체의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등으로 구성된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

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지난 6월부터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보존건물인 옛 도청 건물과 잇닿아 있는 별관(옛 도청 본관에서 도의회 사이 4층 콘크리트 건물)이 80년 광주항쟁 유적지라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5월 단체 등과 협의해 광주항쟁 유적지인 상무관, 도청본관,

도청민원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등 5개 건물을 존치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보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철거가 확정된 건물을 추가로 존치하면 사실상 문화전당의 전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3개월여 동안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는 2012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체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진단은 공대위가 농성에 돌입하자 8억여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상무관, 도청본관 등 5개 보존건물에 대

한 활용 방안 및 리모델링 기본 설계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설계 용역비 8억원을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별관 철거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옛 전남도의회 건물에 대한 해체 작업도 중단됐으며, 사실상 전당 조성공사의 핵심인 문화전당 부지 터파기 공事も 지연되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단과 공대위 등 당사와 대화의 창구를 열고 광주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문화수도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면으로 계속>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햇볕정책 의미 축소 시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역민 반발

정부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에 큰 획을 그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통일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햇볕정책도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하려는 의견을 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교과서 수정 움직임과 맞물려 국방부, 통일부, 대한상의 등은 교과서 내용을 보수적 시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3·1운동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민족운동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 정신은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되었다'고 기술된 현 교과서 내용을 두 번째 문장(이러한~계승되었

다)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헌법전문에 규정된 대표적 항일 투쟁이자, 건국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한 4·19나 5·18, 6월항쟁의 근간이 됐다는 것이 그동안의 통설이었다. 더구나 5·18정신의 헌법전문 삽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의 연계성을 부인한 대한상의의 건의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상필기자 camus@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선현주 사무국장은 "천일과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역량이 보수 언론을 비롯한 정·계계 등 한국 사회 전반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권의 근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여론은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한 교과과정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여론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필기자 camus@

호남권 中企 10년 생존율 최하위

산업구조 취약 등 원인... 창업 4년 째가 생존 고비

신용보증기금 분석

광주·전남 등 호남권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 4년째 생존의 고비를 맞고, 10년을 전후로 안정적 성장 또는 퇴출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의 창업 후 생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경쟁력 강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광주·전남 등 호남권 중소기업 가운데 설립 후 4년차들의 부실 위험률이 6.8%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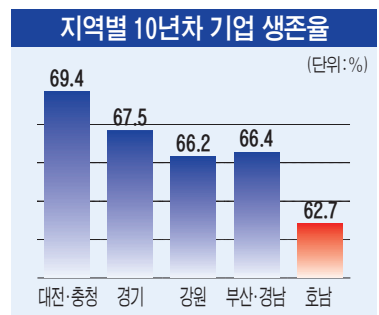
이는 연차별 수치 가운데 부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창업 후 4년째가 지역 기업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대 고비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업체들의 위험률은 4년차에서 정점을 이룬 뒤 5년차(5.8%), 6년차(4.8%), 7년차(4.4%) 등으로 이어지면서 위험성이 꾸준히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창업 10년째가 되면 재도약과 도태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지역 업체들은 창업 후 평균 9년11개월 이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동반 둔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평균(10년2개월)에 비해 3개월 가량 빠른 시점으로 ▲부산·경남(10년6개월) ▲인천(10년4개월) ▲대전·충청(10년2개월) 보다 성장 둔화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중소기업의 창업 후 생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의 경영 및 재정 건전성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적이다.



창업 후 10년을 기점으로 분석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존율은 62.7%로, 전국 평균(65%)은 물론 ▲대전·충청(69.4%) ▲경기(67.5%) ▲부산·경남(66.4%) ▲강원(66.2%) 등에 크게 못미쳤다.

지역 업체들의 생존율이 낮은 것은 지역내 산업구조 취약성과 무리한 외형성장 추세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보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증가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총자산 및 영업이익증가율이 높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영혁신과 신규 투자 등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신보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59만여곳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창업-성장-성숙-퇴출' 주기를 분석한 것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社 告

제29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김남호 교수 '건강한 혈액 투석' 주제 강의
25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5일(목) '제29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강연하고 현장에 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건강한 혈액투석'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김남호 신장내과 교수로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 신부전의 진단과 예방, 신장 이식수술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 내용은 오는 30일(화)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건강한 혈액투석
- 강 사 : 김남호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 대한신장학회 간행위원장
- 대한내과학회 신장 전문위원
- 미국·유럽 신장학회 회원
- 전남대병원 신장센터 소장

- 일 시 : 9월 2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